제2장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제 1 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1. BDA 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북한은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2005년 11월 9일~11일)에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은행의 북측 계좌와 관련하여 취한 금융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결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마카오 소재 BDA 은행을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문제삼아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제311조에 따라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한 것이 대북 금융제재이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BDA 관련 금융조치가 대북적대시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BDA 관련 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익보호 차원의 법집행 조치로서 북핵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6자회담은 조건없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의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북측의 조치가 필요하며 ▲BDA 문제가 6자회담의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6자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북경 미 · 북 · 중 3자회동, 3월 뉴욕 미국의 BDA문제에 관한 대북 브리핑, 4월 동경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회의 계기에 관련국간 협의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3월 뉴욕에서 개최된 BDA 관련 브리핑에는 이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석하였는데, 미국과 북한은 각기 BDA 관련조치에 대한 북측의 주요 관심사항과 미국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를 계기로 5월 23일 한 · 미, 한 · 중, 한 · 러 외교장관회담을 각각 개최하고 6월 29일에는 반기문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주요 인사들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미국 · 일본 · 러시아 등과의 외교차관 협의를 연속으로 개최하는 등 6자회담 과정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상황 타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미측의 금융 관련 조치 개요

■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 15일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제311조에 따른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designation)하고 특별조치(special measures)를 예고(proposed rule-making)

● 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내에 BDA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거래처 은행들의 BDA 대리계좌 개설 여부를 감시토록 규정(관보에 게재)

※ PATRIOT Act 311조는 어느 기관을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단수 또는 복수로 부과하도록 규정
- 특정 금융거래의 기록 및 보고
- 특정계좌 소유주에 대한 정보 제공
- 특정 대리계좌 또는 지급계좌(payable-through accounts)에 대한 정보 제공
- 대리계좌 개설 및 유지 금지(*BDA에 적용)

■ 이에 대해 마카오 당국은 BDA 내 북한 관련 구좌에 대한 자체 동결 조치 시행

■ 미 재무부는 2007년 3월 14일 BDA에 대한 특별 조치를 확정 발표(final rule)하였으며 4월 18일에 동 조치가 발효

2.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와 회담 재개 노력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7월 15일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에 대해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8] 동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미사일 모라토리움 재확인을 요구하며 ▲북한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재원, 물자 이전 방지를 회원국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즉각 복귀 및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동시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여 나가는 두 가지 방향의 균형된 접근을 취하여 나갔다.[9]

이에 따라, 한 · 미 양국 정상은 9월 14일 워싱턴에서의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담 재개 및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 · 미 양국 정상간 합의는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 진전을 위한 관련국들의 공동의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10]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과 대책을 협의하고, 단호하고 엄중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대통령 · 외교장관 · 차관 · 6자회담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주요국과 연쇄협의를 갖고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11] 정부 내에서는 안보정책조정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부내 즉응체제를 수립하고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대책반(Task

8) 한편, 북한은 7월 1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동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였다.

9) 우리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각적인 협의와 ASEAN+3/ARF 외교장관회의(2006년 7월 26~28일, 쿠알라룸푸르)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재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는 균형된 접근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한편, ASEAN+3/ARF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동이 추진되었으나 북한측이 BDA 문제 해결 이전 6자회담 과정 복귀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역내 관심국간 10개국 외교장관 회동이 개최되어 향후 대응방향 등이 협의되었다.

10) 북한은 10월 9일 11시 47분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형식을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하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같은날 10시 35분 함경북도 화대군 지역에서 진도 3.58~3.7 규모의 지진파를 탐지하였다고 밝혔다.

11) 10월 9일에는 한 · 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같은 날 한 · 미 정상간의 전화협의가 있었다. 이어 10월 13일에는 한 · 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10월 16일 한 · 러 정상간 전화협의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10월 9일 한 · 미 · 일 3자 외교장관 통화 및 한 · 미 · 일 · 중 · 러 5자 외교장관 통화가 실시되었으며, 10월 19일 한 · 미/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10월 20일 한 · 일 외교장관회담, 10월 27일 한 · 중 외교장관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Force)을 구성하였으며 ▲전재외공관에 실시간으로 우리 입장 및 대책을 통보하고, ▲북핵외교기획단 등 관련 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였다.

정부 성명(2006년 10월 9일)

우리 정부는 10월 9일 북한의 함북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 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응하여 10월 15일 북한의 미사일·WMD 관련 물자 이전·금융 거래 금지 및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지지하고,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요지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되,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처를 해나갈 필요성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15일) 요지

- 대북한 요구사항
  - 북한 핵실험 규탄, 추가적 핵실험 ·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NPT 복귀 등 요구
  - 북한이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을 재확립할 것을 결의
  -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여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결의
  -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촉구 및 9.19 공동성명 이행 필요성 지적
- 대북한 제재조치(회원국 의무사항)
  - ① 북한에 대한 WMD · 주요 재래식 무기 및 관련물자, 사치품(luxury goods) 등의 공급 · 판매 · 이전 금지, ② 북한으로부터의 해당품목 조달 금지, ③ 해당품목 관련 용역 제공 금지, ④ 제재대상 개인 · 단체에 대한 금융 동결 및 재원 이전 방지, ⑤ 제재대상 개인 · 단체에 대한 출입국제재, ⑥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inspection of cargo)를 포함한 제재이행 감시조치 시행
  -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설치 · 운영
  - 북한의 결의 이행을 주시하면서, 제재조치의 강화 · 완화 · 해제 여부 검토

3. 6자회담 재개 및 2.13 합의 도출

1)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개최 : 회담의 재개

북한의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 · 이행되고, 우리와 미 · 중 등 관련국들이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한 결과, 미 · 북 · 중 3개국이 2006년 10월 31일 북경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회담 재개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하노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6자회담 참가국들과 총 13회에 달하는 북핵 관련 연쇄 협의를 갖고, 차기 6자회담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12]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간에는 회담 재개시 실질적인 성과의 도출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사전 조율과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12월 18일~22일간 개최되었다. 1년 1개월만에 재개된 동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성실히

12) 먼저 11월 18~19일간 하노이 개최 APEC 계기에 미 · 일 · 중 · 러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한 · 미 · 일 3자 정상회의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 개최 직전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간 한 · 미/한 · 일/한 · 미 · 일 3자 협의를 갖고 보다 세부적으로 회담 대책을 조율하였다.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BDA 문제 해결 등의 진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실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휴회(recess)가 선언되었으며,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서로 조율된 외교적 대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로서,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차기회담 재개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또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해를 넘겨 2007년 1월 중순 베를린에서 미 · 북은 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협의를 갖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과 BDA 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하여 향후 6자회담 재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개최 : 2.13 합의 도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를 2007년 2월 8일~13일간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최초의 구체적인 이행합의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9.19 공동성명을 실천단계에 진입시키고 실질적인



북핵 6자회담 타결(2007.2.13, 베이징)

핵폐기 과정을 개시하는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5개 실무그룹 설치로 공동성명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확보하게 되었다.

2.13 합의의 주요 성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시설 폐쇄(shutdown)를 넘어 불능화(disablement) 단계까지 합의문에 포함시킴으로써 핵폐기 과정으로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1994년 미 · 북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북한의 불능화 과정의 구체적 행동과 진전이 있을 때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제공방식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참가국들이 균등과 형평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에 따라 대북지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6자회담을 통한 대북지원 분담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수석대표회의(2007.2.8, 베이징)

셋째, 미 · 북/일 · 북 관계정상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관련국들간 상호 우려사항의 해소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개 실무그룹이 동시에 가동하도록 함으로써 실무그룹들의 논의가 서로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넷째,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북아 평화 · 안보체제 실무그룹은 그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6자회담 진전은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 · 안보체제 기반을 구축하여 역내에 새로운 안보 구도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2.13 합의는 비핵화와 관련된 단계적 조치를 구체화하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북지원, 미 · 북/일 · 북간 관계정상화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재확인 및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논의 개시 등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 · 안보 · 경제적 우려를 해소하여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지역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유도하는 다층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 요지

- ① 북한내 핵시설의 폐쇄 · 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 60일이내 중유 5만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 미 · 북/일 · 북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 미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개시
- 대북 경제 · 에너지 · 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 ①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②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기간중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 제공
  - ※ 지원부담은 한 · 미 · 중 · 러간 균등 ·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담 합의(일측은 자국 우려사항 진전시 참여 기대)
-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 · 북 관계정상화, △일 · 북 관계정상화, △경제 ·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 안보체제
-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 개최

3) 2.13 합의 도출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한·미 정상회담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합의와 11월 하노이 APEC 계기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한·미간 협력을 포함한 여타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금번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시 최대 쟁점이었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안제시를 통해 합의 도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연간 일정량의 지원이 아닌 북측의 비핵화 행동과 연결하는 성과급 개념(more for more)을 제안하였으며,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각국이 대북 지원을 분담키로 합의하는 데에도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6자회담 경과

		개최 기간	주요 결과	비 고
제1차 회담		2003.8.27~29	■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2차 회담		2004.2.25~28	■ 의장성명 형식으로 최초 서면 합의 도출	
제3차 회담		2004.6.23~26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의 필요성, '말 대 말' /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남·북·미가 최초로 구체 해결방안 제시
제4차 회담	1단계회의	2005.7.26~8.7	■ 6자회담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 채택 – 북한의 핵폐기 및 여타국의 상응조치 합의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일차적 기반 마련
	2단계회의	2005.9.13~19		
제5차 회담	1단계회의	2005.11.9~11	■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 의지 확인	
	2단계 회의	2006.12.18~22	■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재확인 및 이행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미측의 대북금융 조치 문제 관련 미·북간 별도 협의 병행 개최
	3단계 회의	2007.2.8~13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도출 (2.13 합의)	5개 실무그룹회의 구성 –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4. 향후 전망 및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 실천단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13 합의의 신속 ·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 · 시행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 봉인 및 IAEA 요원의 북한 복귀 등 초기 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완전한 신고 및 불능화 등 다음 단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초기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추어 중유 5만톤을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 단계에서의 대북 지원 문제도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구도 창출 과정에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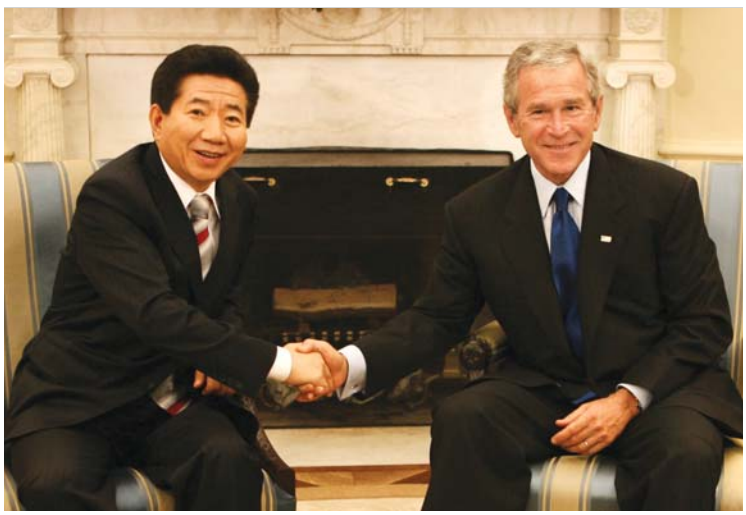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 · 미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제2절 한 · 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1.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 마련

2006년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 북핵문제 관련 상황의 전개에 대해 한 · 미간 강화된 협력과 조율을 통해 대처해 나가면서 한 · 미 양국이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한 해였다.

특히,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간 개최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당면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한 · 미 관계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 · 미 정상회담(2006.9.14, 워싱턴)

2006년 9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참여정부 여섯 번째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문제, 한 · 미 동맹 발전, FTA 협상,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 · 미 관계가 균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 · 미동맹 관계를 더욱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만난 한 · 미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가졌으며, 부시 대통령은 북핵 폐기시 평화체제 구축, 안전보장 및 경제적 혜택 제공 등 적극적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06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 · 미 FTA의 성공적 타결 및 VWP 조속 가입을 위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한 · 미 FTA 협상 타결 및 한국의 VWP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에는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최초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비롯하여 상호 방문 및 다자회의를 계기로 8차례의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한 · 미 외교장관회담(2006.1.19, 워싱턴)

양국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는 2005년 11월 경주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간에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한 · 미간 외교채널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더욱 긴밀한 협의 및 정책조율이 가능케 됨으로써, 양자 차원의 현안 협의는 물론 지역적 · 범세계적 문제와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포괄적 동반자



한 · 미 외교장관회담(2007.3.2, 워싱턴)

관계 발전의 제도적 틀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2007년 1월 5일 송민순 장관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계기에 개최된 한 · 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양측의 진지한 의지를 확인하고 2006년 12월 6자회담에 이은 조속한 차기 회담 개최 및 한 · 미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7년 2월초 6자회담 재개 및 2.13 합의 도출에 이르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미국 대외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미국내 여론지도층 인사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점증해가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미 행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의회 및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중 미국 의회 관계자들의 방한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6년 5월에는 한 · 미 · 일 3국간 의회 교류의 일환으로 제4차 한 · 미 · 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1월에는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과 레인 에반스(Lane Evans) 미 하원의원 일행이 각각 방한, 동북아 정세 및 한 · 미 관계 현안에 대하여 정부 및 국회측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 3월에는 로스코 바틀렛(Roscoe Bartlett) 미 하원의원 일행이 방한하였고, 4월에는 크리스토퍼 본드(Christopher Bond) 미 상원의원이, 11월에는 헨리 하이드(Henry Hyde)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 등 미 하원의원 5명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하였다.

또한, 다수의 미국 주지사와 미국내 주요 도시 시장 등 미 지방정부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들과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및 우호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13]

2006년에는 미 의회 내에서 한 · 미 FTA 협상의 의의를 평가하는 의원들의 발언, 한 · 미 전략대화 개최를 환영하고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는 의원들의 연명 서한 등 한 · 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움직임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한 · 미간 민간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한 미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미 의회 내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미 의원들이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지지하는 부시 대통령 앞 연명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 · 미 정상회담

일 자	계 기
2006.9.14	노무현 대통령 방미(9.12~16)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06.11.18	APEC 계기 한 · 미 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한 · 미 외교장관회담

일 자	계 기
2006.1.19	반기문 장관 방미(1.17~21) 계기 제1차 한 · 미 장관급 전략 대화
2006.7.28	ARF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콸라룸프르)
2006.9.14	노무현 대통령 방미(9.14)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안보보좌관(2+2) 회담
2006.10.19	Rice 미 국무장관 방한(10.19~20)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6.11.18	APEC 계기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라이스 장관간 면담
2007.1.5	송민순 장관 방미(1.1~6)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7.3.2	송민순 장관 방미(3.1~3)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7.5.3	'이라크와의 국제협약(ICI)' 출범회의 참석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이집트)

13) 6월에는 앤쏘니 윌리엄스(Anthony Williams) 워싱턴 D.C. 시장과 미첼 대니엘스(Mitchell Daniels) 인디애나 주지사가 방한하였다. 10월에는 제4차 한 · 미 태평양 연안주 연례합동회의 참석차 크리스틴 그리고어(Christine Gregoire) 워싱턴 주지사, 무피 한네만(Mufi Hanneman) 호놀룰루 시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Antonio Villaraigosa) LA 시장 등이 방한하였고, 12월에는 미트 롬니(Mitt Romney)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2. 주요 현안의 타결 및 진전

지난 반세기 동안 한 · 미 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관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 · 미 양국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맹 재조정을 활력 있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 미동맹을 보다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06년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방위비 분담,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현안들이 호혜적인 방향으로 합의, 이행되어 나감으로써, 한 · 미 양국이 개별 현안 협의를 넘어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한 · 미 동맹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 · 미 양국은 한국주도-미국지원의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건강하고 강력한 동맹관계의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 10월 20일 개최된 제38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14]에서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전작권 전환 및 2007년 상반기 중 구체 이행계획 도출에 합의한데 이어, 2007년 2월 23일 열린 한 · 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전환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한 · 미 양국의 공통된 이해와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한 · 미 동맹이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가능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14)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 · 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개최되는 한 · 미 국방 · 외교 당국간의 연례회의이다. 1968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3차 회의까지는 '한 · 미 국방각료회의'로 지칭되었으나 양국 외교관리가 참석한 1971년 제4차 회의부터는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의'로 지칭되고 있다.

2)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 · 미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12차례의 미래 한 · 미 동맹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군사임무전환, 연합전력 증강 등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상호 유익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2004년 10월 개최된 제36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는 FOTA에 이어 미래 한 · 미 동맹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2005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05년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6월까지 총 13차례의 SPI를 개최하였다.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실적

회의	개최일자	대 표 단	개최장소
6차	2006.2.14	–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차관보, James Foster 국무부 한국과장	미국 (괌)
7차	2006.3.21	–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차관보, Joseph Yun 주한미대사관 공사참사관	한국 (서울)
8차	2006.5.25	–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Andrew Hyde 국무부 한국과 정무팀장	미국 (하와이)
9차	2006.7.13	–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김홍균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Joseph Yun 공사참사관	한국 (서울)
10차	2006.9.27~28	–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김홍균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Kathleen Stephens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미국 (워싱턴)
11차	2007.2.7~8	–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황승현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Andrew Hyde 국무부 한국과 정무팀장	한국 (서울)
12차	2007.4.16	–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황승현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Maureen Cormack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미국 (워싱턴)
13차	2007.6.8	–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황승현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Sung Kim 국무무 한국과장	한국 (서울)

한 · 미 양국은 그간 SPI를 통해 FOTA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 · 미 동맹의 장기적 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양국 국방 · 외교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SPI는 동맹현안 해결을 위한 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양국은 2007년에도 SPI를 통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등 동맹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3) 방위비 분담 협상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2006.8.9~10, 서울)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의 안보적 중요성과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 향상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일명,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왔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04년까지는 국방부에서 담당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200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의 고위급 회담 및 수차례의 실무급 협상을 개최하여 2006년 12월 새로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2007년 4월 국회 동의를 받았다.

협상 결과, 2007년~2008년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대비 6.6% 증액된 7,255억원으로 합의되었으며, 2008년의 분담금은 2007년 분담금에 물가 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하여 지급키로 하였다. 금번 합의는 2005년~2006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해 주한미군측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족 등의 자금난을 겪어 왔고, 이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금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 재배치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 · 미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 미 양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4)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 · 미 양국은 2005년 2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1월 19일 제1차 한 · 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합의하였다.

-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 ▶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금번 합의는 한 · 미 양국의 필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 · 미 동맹이 21세기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이행

한 · 미 양국은 2004년 10월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한 · 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두 협정문은 2004년 12월 국회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이후, 한 · 미 양국은 SPI를 통해 재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2006년 상반기 중 평택지역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6월 현재 부지개발 및 설계 등 본격적인 공사착수단계로 이행중이다.

기지 재배치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 기지를 통폐합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미군기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한 · 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3. 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운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2002년부터 한시적으로 가동된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을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존의 SOFA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함께 주한미군과의 협의채널로 정례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6년 10월 24일 개최된 제185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특별합동위원회 회의 및 수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하여 한 · 미 양측간의 SOFA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하였다. 우선 제185차 합동위원회에서 미군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분과위 차원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도록 '문화재보호 협의 관련 과제부여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한 · 미 양측은 2005년 12월에 '문화재 조사 절차서'를 체결

하고, 이에 따라 2006년~2011년간 6개년 계획으로 주한미군 주둔지내 문화재조사를 실시중이며, 2006년도에는 경기도 평택 소재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 등 11개 기지 970만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측과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예방 및 주한미군용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키로 하였다. 동 합의서에 따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은 주한미군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냉장·냉동 식육과 그 가공육제품에 대하여 지정시설에서 주한미군이 검역실시한 결과를 보고받게 되며, 필요시 검역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검역당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원산지 역내에서 악성질병 발생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게 된다. 동 합의각서 서명으로, 한·미 양측은 2006년 5월 서명된 '주한미군용 농산물 합동검역합의각서'와 함께 2001년 SOFA 제2차 개정시 제26조 양해사항에 마련된 동식물 합동검역 실시 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발생과 관련, 한·미 양국은 주요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긴밀한 협조하에 사건을 처리하였고, 미측 주요 당국자가 사과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우려할 만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측과 관련 대책을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한 미군 역시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 개발과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 왔으며 실제로 미군범죄율은 계속 감소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군기지 및 그 주변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측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미간 2004년 12월에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및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 협정에 따라 60여개의 미군기지가 우리 국민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2005년 6월부터 약 1년간 환경공동조사가 완료된 29개 반환대상 기지를 중심으로 오염 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7월 14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시 14개 기지를 SOFA 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4월 13일 동 기지들에 대한 반환 절차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2007년 4월 16일 제12차 SPI시 9개 기지를 SOFA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는 데 합의하고 5월 31일 동 기지들에 대한 반환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간 이루어진 SOFA 개정 및 개선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SOFA 틀 내에서의 운영개선을 계속 도모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SOFA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미국측과의 협조를 통해 논의 중인 SOFA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 · 미 SOFA 연혁

■ 한 · 미 SOFA 체결(1966.7.9)
- 배경
  -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필요
- 주요 내용
  - 형사재판권, 시설 · 구역 등 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

■ 제1차 한 · 미 SOFA 개정(1991.2.1)
- 배경
  - 우리측 형사재판권 행사에 대한 제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문제, 미군기지내 물자의 국내 시장으로의 불법 유출문제 대두
- 주요 내용
  - 형사재판관할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한측 1차 형사재판권 대상 범죄 확대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노동법령 규정 적용을 통한 노동관계 개선
  -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공여지) 반환근거 마련
  - 한국인의 미군 비세출기관(PX 등) 이용 통제

■ 제2차 한 · 미 SOFA 개정(2001.1.18)
- 배경
  - 윤금이씨 살해사건(1992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1995년) 등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 따른 SOFA 개정 여론 증가,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채택(2000년)
- 주요 내용
  - 살인, 강간, 불법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기소시 신병인도 등 우리측 형사재판권 행사 범위 확대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환경보호에 관한 SOFA 명문 규정 최초 마련
  -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해고조건 강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위 강화
  -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 변경시 협의 의무 부과 등 미군의 시설 · 구역 사용 관련 우리측과 협의 확대

제3절 주변국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1. 한 · 일 관계

한 · 일 관계는 과거사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꾸준한 우호 · 협력 관계 발전을 시현해 왔다. 특히, 2006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한 이후 베트남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한 한 · 일 정상회담, 2006년 12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방일 등을 통해 한 · 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조성하였으며, '한 · 일교류축제한마당',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사천왕사 왔소 2006' 등의 문화행사를 통해 양국간 우의를 다졌다.



'사천왕사 왔소 2006' 행사(2006.11.5, 오사카)

그러나, 시마네현의 2월 22일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동해 해양과학조사 문제, 대북한 경제제재 실시 등 일본의 대북강경 자세, 독도 및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지속적인 망언 등으로 한 · 일 관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한 · 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한 · 일 정상회담, 한 · 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미래지향적 한 · 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 · 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통해,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 동해해저 지명문제 등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본이 '보통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양국간 인적, 경제적 교류는 2005년 연간 인적교류 418만명, 교역규모 724억불에서, 2006년도에는 각각 446만명, 785억불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 3월부터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사증 항구적 면제'가 실시되는 한편, 일본 관광취업(Working Holiday) 비자 발급규모가 1,800건에서 3,600건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5월에는 한 · 일 문화장관간 회담을 통해 '한 · 일 관광교류확대 공동사업'에 합의하는 등 한 · 일 관계가 국민교류 차원의 성숙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여러 정치 · 외교 차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별 과거사 현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 하다. 2006년 2월에는 일본의 '한센인 보상법' 제정으로 우리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조치가 실시되었으며, 11월에는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할린 잔류 한인들을 위한 '사할린 문화센터'가 개관되었다.

한 · 일 양국은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나, 양국간의 역사인식 격차가 지속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구축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양국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 발족한 제1기 한 · 일 역사공동연구는 2005년 5월에 19개 주제, 총 2천페이지 이상에 이르는 55편의 논문 등 방대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2007년 6월 제2기 역사공동연구회가 발족하였다.

2006년도 한 · 일간 주요 인사 교류

▶ 한 · 일 정상회담

일 자	주 요 내 용
2006.10.9	아베 총리 내외 방한
2006.11.18	APEC 계기 한 · 일, 한 · 미 · 일 정상회담 개최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 요 내 용
2006.5.23	ACD외교장관회의 계기(도하)
2006.7.27	ASEAN PMC 계기(쿠알라룸푸르)
2006.8.7~9	하시모토 前 총리 장례식 참석차 반기문 외교장관 방일
2006.10.19~20	아소 외무대신 방한
2006.11.5~6	반기문 외교장관 방일
2006.11.17	송민순 장관내정자, APEC 각료회의 계기 상견례 겸 회담
2006.12.26~27	송민순 외교장관 방일

▶ 한 · 일 고위급 교류

일 자	주 요 내 용
2006.1.6~7	스기우라 일본 법무대신 비공식 방한
2006.3.5~7	유명환 제1차관 방일
2006.3.7~1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방일
2006.3.6~18	나카소네 일 · 한 협력위 대표단 방한
2006.5.1~2	시오자키 외무부대신 방한
2006.5.2~3	하토야마 민주당 간사장 방한
2006.6.12~13	아이사와 자민당 간사장대리 방한
2006.9.6~7	야치 외무사무차관 방한
2006.9.5~11	시이 日 공산당 위원장 방한
2006.9.21~22	문희상 한 · 일 의원연맹 회장 등 방일
2006.11.6~8	김수한 회장 등 한 · 일 친선협회 회장단 방일
2006.12.7~10	대통령 자문기구 주요 인사 일본 방문

2. 한 · 중 관계

2006년에도 우리 정부는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치 · 외교 · 경제 ·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한 · 중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13일 전례 없는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실무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2006년 9월 ASEM 계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담, 11월 APEC 계기 한 · 중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양국 의회차원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간 교류의 심화 · 확대를 도모하였다. 2006년 1월 김원기 국회의장 방중시 우리 국회는 중국 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와 '교류 · 협력 의정서'를 체결하여 양국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7월 이용희 국회부의장 방중, 9월 중국 우윈치무거(烏雲其木格)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등을 통하여 양국 의회차원의 교류를 강화하였다.

또한, 한 · 중 양국은 외교 · 안보문제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의채널을 구축하였다. 2005년 11월 한 · 중 정상은 외교 · 안보차원에서의 한 ·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 중 외교차관회의 및 한 · 중 외교안보대화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 · 중 양국은 제1차 한 · 중 외교차관회의(2006년 5월 23일, 북경) 및 제2차 한 · 중 외교안보대화(2006년 6월 9일, 서울)[15]를 개최하여 한 · 중간 외교 · 안보협력 및 동북아 지역협력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6년 5월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계기 한 · 중 외교장관회담, 6월 반기문 외교장관 방중계기 한 · 중 외교장관회담 등 수차례의 한 · 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였다.

북핵문제와 관련,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10월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야기된 위기상황 속에서도 한 · 중 양국은 사태의 추가 악화 방지, 대화 분위기 조성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13일 북경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 겸 UN 사무총장 내정자는 10월 27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예방 및 한 · 중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15) 한 · 중 외교차관회의 및 한 · 중 외교안보대화는 2005.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한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며, 제1차 한 · 중 외교 · 국방 당국간 안보대화는 2002년 10월 북경에서 최초로 개최된 바 있다.

역사문제와 관련, 2006년 9월 국내언론의 '동북공정' 연구결과 관련 보도[16]를 계기로 중국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국내 각계의 관심이 다시 고조 되었다. 이에 우리측은 2006년 9월 10일 ASEM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간 면담 및 10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계기 한 · 중 정상회담 등의 기회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중국측은 기존의 한 · 중간 구두 양해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고, 양측은 한 · 중간 학술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탈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관련, 2006년 10월 중국으로 탈북해 온 국군포로가족 9인의 북송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2006년은 한 · 중 양국이 경제 · 통상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한 해였다. 2006년 한 · 중 교역액은 1,180억불을 기록, 2005년 1,005억불 대비 17.4% 증가하였다. 이 같은 양국간 급속한 교역규모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2005년 11월 한 · 중 정상회담시 설정한 2012년까지 '교역액 2천억불' 목표는 앞당겨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 중 양국간의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양국 상호 방문자 수는 482만명에 달하였다. 문화방면에서도 중국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지속되어 '한류(韓流)' 열풍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중국어 학습열풍 및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한풍(漢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등 한 · 중 외교관계자(2006.10.13, 베이징)

우리 정부는 한 · 중 관계가 북핵문제 등 당면한 정치 ·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 · 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의 대외교류 · 협력에서 점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양국 관계발전의 큰 틀에 입각하여 한 · 중 양국 관계가 계속 건전하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6) 2006년 9월 6일 국내 각종 언론은 중국사회과학원이 변강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18편의 논문에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까지의 5개 왕조의 역사가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006년도 한 · 중간 주요 인사 교류

▶ 한 · 중 정상회담

일 자	주 요 내 용
2006.9.10	ASEM 계기 원자바오 총리 회담(헬싱키)
2006.10.13	노무현 대통령 방중
2006.11.17	APEC 계기(하노이)

▶ 한 · 중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 요 내 용
2006.5.23	ACD 회의 계기(도하)
2006.6.26~27	반기문 장관 방중
2006.10.27~28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정자 겸 외교부장관 방중
2006.11.19	APEC 계기(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하노이)

▶ 한 · 중 고위급 교류

일 자	주 요 내 용
2006.1.8~14	김원기 국회의장 방중
2006.1.19~21	천정배 법무부장관 방중
2006.3.27~4.1	손학규 경기도 지사 방중
2006.4.15~19	차오깡추안(曹剛川) 중국 국방장관 방한
2006.6.30~7.3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방중
2006.7.12~16	이용희 국회부의장 등 초당파 의원 12명 방중
2006.9.26~30	우윈치무거(烏雲其木格)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2006.9.29~10.1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2006.10.22~25	김진선 강원도지사 방중
2006.10.24~30	이용훈 대법원장 방중
2006.10.30~11.5	장쭈어지(張左己) 흑룡강성장 방한
2006.12.15~17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방중
2006.12.20~24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방중

3. 한 · 중 · 일 3국간 동북아 협력

한 · 중 · 일 3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높은 수준의 IT 기술과 인적자원 등을 가진 우리나라,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거대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일본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3국은 세계 인구의 23.5%, 세계 GDP의 18.6%, 세계 무역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한 · 중 · 일 외교장관회담(2007.6.3, 제주)

1999년부터는 한 · 중 · 일 정상회의가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장관급 교류, 실무당국간 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으로 인해 2004년 이후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 · 중 · 일 3국간에는 현재 여러 협의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3국간 정상회의를 비롯, 외교, 경제통상, 재무, 환경, 교육, IT, 에너지, 특허, 기상, 수산 분야의 장관회의, 국장급 회의 등 다양한 분야와 레벨에서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 중 · 일 3국간 협력질서 구축은 3국의 이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한 · 중 · 일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하여, 경제 · 통상,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3국간 협력 분야를 꾸준히 확대 ·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 · 중 · 일간 주요 통계

▶ 3국의 경제규모

	2005년	2006년
GDP	7조 6,211억불	8조 3,204억불
	전세계 43조 6,163억불의 17.5%	전세계 46조 6,600억불의 18.6%
교역량	3조 858억불	3조 6,214억불
	전세계 19조 5,121억불의 16%	전세계 21조 3,235억불의 17%
총인구	14억 8,395만명	15억 3,147만명
	전세계 64억 6,470만명의 22.9%	전세계 65억 2,517만명의 23.5%

▶ 3국간 교역량

	2005년 교역량	2006년 교역량
한 · 일	724억불	785억불
한 · 중	1,006억불	1,180억불
중 · 일	1,898억불	2,073억불

▶ 인적교류

(2006년 기준)

	상호 방문객수	주당 항공편수
한 · 일	446만명	477편
한 · 중	482만명	779편
중 · 일	484만명	726편

※ 항공편수는 화물 · 여객 및 제3국 항공사를 포함한 수치
※ 중 · 일간 편수는 서머 스케쥴(피크타임) 적용 수치

▶ 3국간 투자규모

(2006년말 현재)

	규모	규모
한 · 일	(한 → 일) 19억불	(일 → 한) 195억불
한 · 중	(한 → 중) 39억불	(중 → 한) 0.4억불
중 · 일	(일 → 중) 99억불	(중 → 일) –

(출처 : 한국무역협회)

4. 한 · 러 관계

한 · 러 양국은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17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6년에도 한 · 러 양국은 APEC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mutually trustful comprehensive partnership)를 심화 ·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정무분야 협력은 2006년 10월 프라드코프(Fradkov) 러시아 총리의 방한과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로 더욱 긴밀해졌다.

또한, 양국은 경제 · 통상 분야에서도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다. 2006년 양국 교역량은 98억불 수준으로 1992년(1억 9천3백만불) 대비 약 50배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 러 양국간 주요 통계

(단위 : 천불)		1992년	2006년	비 고
교역액	총 액	192,914	9,752,215	▲50.6배
	대러 수출	118,084	5,179,248	▲43.9배
	대러 수입	74,830	4,572,967	▲61.1배
	무역 수지	43,254	606,281	▲14배
(단위 : 명)		1997년	2006년	비 고
인적교류	방러 한 국 인	30,328	55,096(2005년)	▲1.8배
	방한 러시아인	136,847	144,611	▲1.1배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최근에는 양국간 협력관계가 경제 · 통상 분야에서 우주, 에너지 · 자원 및 물류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함께 최초 '한국인 우주인 배출사업' 및 '우주발사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4월에는 한국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비행에 도전할 예정이다.

에너지 · 자원 및 물류 분야에서도 한 · 러 양국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러시아와 함께 서캄차트카 유전 시추를 시작하여 2012년경 생산을 개시할 전망이며, 러시아 사할린 II 광구에서 2008년부터 20년간 150만톤의 LNG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여건이 개선될 경우 TKR-TSR 연결사업 등 물류분야에서 남 · 북 · 러 3각 협력 사업의 추진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예상 노선도



▶ 남북 및 대륙횡단철도 이용물동량 추정

(단위 : TEU, 천톤)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컨 테 이 너	641	1,092	1,554	2,078
일 반 화 물	432	1,281	2,028	3,078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제 4 절 남북 교류협력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1.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 안정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면과제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06년의 경우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적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ASEM 정상회의(9월 9일~12일), 제61차 유엔총회(9월 17일~27일), APEC 정상회의(11월 17일~19일) 등 주요 다자간 정상회의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회담시 평화번영정책이 남북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온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2. 남북 교류협력 심화를 위한 외교노력 지속

2006년 하반기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으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 등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대두되는 등 남북간

교류 · 협력을 위한 국내외 환경이 악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추가분양 유보, 금강산 체험학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경협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2007.1.24, 개성)

무엇보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개선 및 이해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교단, 한 · 미 의원 외교협의회 소속 미국 의원,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 등 영향력 있는 해외인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적극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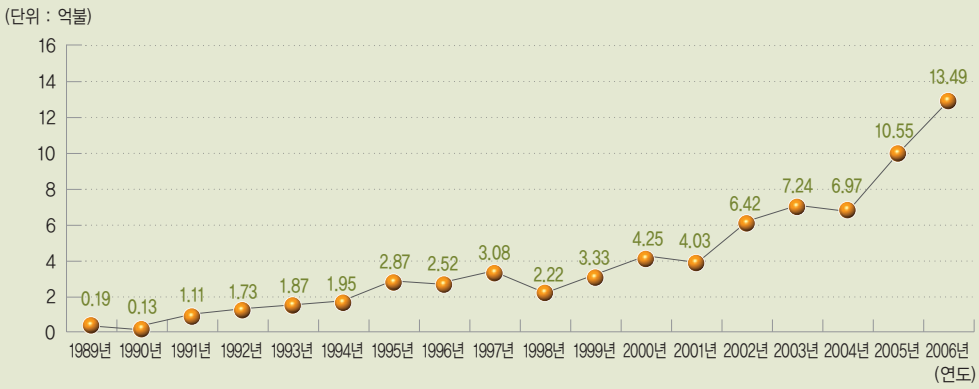
또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의 효율적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의 북한 지역 내 설치를 추진하면서 미국측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접촉, 동 장비의 반출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미 상무부 수출관리규정상[17]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하여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사업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2003년 6월 착공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2004년 12월 첫 상품을 생산한 이후 2년 1개월 만인 2007년 1월 총 생산액 1억불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 7월 현재 북측 근로자 16,000여명이 총 26개 입주기업에서 근무중이다.

17)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산 상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테러지원국(북한 포함) 등에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출처 : 통일부)

2001년 이후 남북 왕래인원 변동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 경제, 사회문화 교류, 대북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계기 남북 왕래 인원수로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관련 왕래 인원은 제외

(출처 : 통일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정부간 협의회 개최 계기에 동 사업의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 · 홍보하고 있으며, 외국 인사의 방문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남북 당국간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되어 2006년도 남북교역액은 전년보다 27.8% 증가한 13억 4,974만불을 달성하였으며, 남북간 왕래 인원은 10만명(101,708명, 금강산 관광객 제외)을 넘어섰다.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지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국제사회와의 접촉 확대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및 북한인력 연수, 교육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외교적 지원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북지원 쌀 선적(2006.8.30, 목포)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산모 및 영유아 보건 · 영양개선 사업, 식수 · 환경개선 사업, 교육사업에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참여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WHO와 UNICEF에 각각 1,200만불과 223만불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엔 아 · 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대북기술인력 양성사업[18]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 북한 관료 및 전문가들이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늘리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양자차원의 직접적인 쌀 차관 제공 외에, 북한이 유엔 긴급구호를 요청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해 왔으며, 2007년에도 WFP 대북지원사업에 약 2천만불을 공여하였다.

18) 에너지, 환경, 교통, 지역협력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통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철도성, 중앙통계국, 사회과학원 등 소속 관료 및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배양 및 ESCAP 역내 국가와의 교류 촉진

4. 북한이탈주민 문제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 하에 이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의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등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에는 2,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하였으며 현재 1만명 이상의 탈북자가 국내에 정착해 있다.

탈북자 국내입국 추세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명)	1,141	1,281	1,894	1,383	2,019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 복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 학습도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을 통해 북한내 식량난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탈북 요인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제 5 절 동북아 평화구축 기반 조성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특히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고자 국제 안보기구와 교류협력 및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여해 왔다.

1. 국제 안보기구와의 협력

1)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우리나라는 1994년 ARF(ASEAN Regional Forum) 출범 당시부터 매년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각급 공식회의에 참가하는 등 ARF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006년 7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3차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26개 전회원국들이 참가하여 테러, 초국가 범죄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ARF 차원의 대응방안과 ARF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 및 이스라엘 · 리비아간 무력충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장관은 북핵 문제, 6자회담 및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중동사태와 테러 및 해양안보 등 여타 국제정세에 대한 토의에도 참가하였다.



제13차 ARF 외교장관회의(2006.7.28, 쿠알라룸푸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Experts and Eminent Persons)회의 출범회의를 2006년 6월 국내에서 개최한 결과와 함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EEPs 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5일~6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주제로 ARF의 자문기구 성격의 EEPs 제2차 회의를 필리핀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냉전 종식과 9 · 11테러 이후 WMD 확산, 테러리즘,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과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범세계적 안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을 위해 NATO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안보협력체와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기문 장관은 2005년 12월 2일 한국 정부 인사로는 최초로 브뤼셀에 위치한 NATO 본부를 방문,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North

Atlantic Council)에서 연설하였다. 이어 2006년 9월 19일에는 UN 총회 계기에 쉐퍼(Scheffer)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상호 관심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우리나라는 냉전종식 이후 국가간 상호의존관계 심화에 따른 유럽과의 안보협력 제고와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의 성공적인 다자안보협의체인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1994년 이후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 for Cooperation)으로서 관계를 강화하여 왔다. OSCE에는 전유럽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5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12월 4일~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4차 OSCE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OSCE와의 관계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OSCE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또한 드 브리샹보(de Brichambaut) OSCE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하여 OSCE와의 전반적인 관계 · 교류 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 비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1) 동북아 협력대화(NEACD)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민 · 관차원(Track 1.5)에서는 이미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대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이다. 2005년 제16차 NEACD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북핵문제, 6자회담,동북아 안보정세 및 과거사문제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북한은 2002년부터 NEACD에 참가하고 있으나 2005년 서울회의에는 불참하였다.

2006년 4월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6개 참가국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동경에서 제17차 NEACD가 개회되어 북핵 문제 등 동북아지역의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2) 아 · 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아 · 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는 21개 아 · 태지역 국가가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안보협력체로 아 · 태지역의 안보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CSCAP는 각 회원국별로 CSCAP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산하에 동북아 다자협력, 해양안보협력, WMD 확산 방지 등 6개 연구반(study group)을 두고 각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민간 안보협의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연구반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 석학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CSCAP 북태평양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 6월에는 CSCAP 정기 총회 겸 안보군축연구회를 개최하여 북 · 미관계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